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심사숙고해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건으로 갑론을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했었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법정공휴일로 만들자는 제안이 늘 있었다. 18대 국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은 대체로 효를 앞세우고 있다.

양쪽 진영의 논리는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어버이날 하루 안 한다고 효사상이 무너져 내릴까, 가정불화와 폐단이 발생할까 이런 너무나 비약된 논리라 생각된다.

추석이나 설날의 연휴는 기본이 3일이다. 어떤 때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때는 거의 모든 가족들이 만난다. 그런데 그 만남이 오히려 부정적인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명절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이혼을 증가, 어르신들의 자살률 증가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생률 증가, 형제간의 혈투 등이 발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때문에 오로지 남을 짓누르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다. 인성은 좀 나빠도 불량한 짓거리들 해도 공부만 잘하면 용서되는 사회. 거꾸로 아무리 착한 품성의 소유자여도 공부를 못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회한한 사회가 지속되는 한 효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도 드물다. 이유는 '공부해라'이다. 그러나 친인척들을 어떻게 알겠는가. 더더욱 한 번도 분적 없는 조상을 알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같은 가정에서 보고 사는 부모형제지간에도 싸늘하게 살아가는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리사회 풍토에서는 언어도단이라 단언 할 수밖에 없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은 도의시 된 체 시험기계가 되어 숙청 일류학교를 졸업하면 휘하겠는가.

이중 상당수는 국가고시 등을 거쳐 국가기관에 근무하거나, 일류기업에서 일할 것이다. 또는 각종 전문직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냉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효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냉혈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류를 형성해 우리사회 이끌어 갈 때 참으로 척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미 이런 모습들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지 않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벌들과 권력자 등 상류층의 나신을 보라. 얼마나 다른 세계 사람들인가.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지만 길 색깔만 다를 뿐이다. 한 겹질만 벗기고 들어가면 흑인과 백인 같은 극대칭이다. 반면에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부류는 또 어떨까.

이들은 이틀대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폐허화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사회적, 반도덕적 외계인 형상으로 각종 사회적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가.

결국 양쪽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작금의 우리사회 자화상인지 않을까. 때문에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만이 효 사상 함양에 정적이지 만은 않다는 것이다.

社說

정보경찰 쇄신 대책 있어야

경찰이 정당이나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해오던 정보활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대학 등 민간기관을 출입하거나 집회 및 시위 참석자 동향 등을 수집해 왔던 업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야기했던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 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확정, 경찰청에 권고했다.

우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치안정보라는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됐던 만큼 수집의 범위를 공공안녕의 위협성으로 좁히자는 의도다.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조정을 추진하고 정보인력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업무도 조정해 경비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비공식적으로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정사 사무실도 본관 청사 안으로 이전할 것을 권했다.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이 제기돼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해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더 충실했으면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Table with 2 columns: 如松 (As Pine) and 如松之盛 (As Pine's Prosperity). Includes characters like 如, 松, 之, 盛 and their meanings.

湖南新聞 (Hunan New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은?

얼마 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아내가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매달려 있던 남편은 양팔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화재가 났을 때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장애 등으로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만약 불이 난 경우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할 때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막혀있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 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뚱뚱' 소리가 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경계벽이 비상탈출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려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본인이 대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옆집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도 아파트에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려주도록 하자.

나정환 / 영암소방서 예방홍보팀

폴리스라인, 우리의 약속이다

집회·시위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았던 사람이라면 경찰관 옆에는 항상 '폴리스라인'이 있음을 보았을 것이다.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은 우리나라 집회 현장에서 집회 공간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약속이고, 기준선이다. 그러나 일부 집회·시위 참여자들은 폴리스라인의 진정한 의미를 침범과 이탈할 경우 처벌을 위한 규제선으로 오해하고 있다.

본질적 목적과 달리 국가가 억압만 하고 자유는 주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시선도 있으며, 이런 오해는 참가자와 경찰 간 불화를 일으키고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찰에게 폴리스라인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 안전을 위한 저지선을 의미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자유를 보장, 일반 시민들에

게는 정당한 집회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불법 폭력시위가 점점 줄어들고 추세이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점거하거나 차선을 넘나들어 교통민원, 경찰과의 충돌 등은 증가하고 있다.

어떤 법규도 쉽게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는 불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듯이, 폴리스라인 침범, 도로를 점거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를 내세운다고 하여도 집회 참가자와 경찰 서로간의 약속을 어리게 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집회·시위의 최종목적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권리를 생각해주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효과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백승진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Advertisement for '문화응성' (Cultural Response)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mutual understanding and happiness in Korea.